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내년 6월까지 가산세 면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려면, 일용근로자, 특수 고용직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들이 그 지급내역, 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세를 일괄 하향 조정했다.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 불성실금액이 전체 지급내역의 5% 이하라면 해당 오류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용역대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미제출의 경우 1% → 0.25%, 지연제출의 경우 0.5% → 0.125%로 내린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환급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했더라도 뒤늦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3월 11일부터 국세청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자주 누락하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을 소개하고, 오늘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제 누락한 사유로는 순전히 몰라서 빠뜨린 경우도 있었지만,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

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2016년~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한 경우 절차적인 문제로 본격적인 환급은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 달라진 공익법인 세법...주식초과보유 의무신고제 도입

공익법인을 탈세 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 규정이 강화됐다.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신고제가 도입된 것이다.

공익법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주 5%를 초과 출연·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유 재산가액의 30%가 계열법인 주식으로 채우는 것도 예외를 제외하고 제한된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3년이 지났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이다.

출연재산 의무지출 대상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이며 종교단체는 제외다.

공익법인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비영리법인 등은 추천신청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은 추천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